

현안과 과제

-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및 비중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low pay)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2014년 3월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로서 OECD 선진국 평균 (2011년 기준, 1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다.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 비중은 52.7%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급제 비중 63.3%보다 낮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일급제와 시급제 비중은 2014년 각각 21.3%, 17.2%로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매우 높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이 저조하다. 국민연금, 직장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가입률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등 근로복지 수혜율도 낮다. 셋째,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의 비중이 2007년 대비 1.6%p 증가하여 2014년 70%를 기록했다. 넷째, 저임금 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대비 5%p 상승해 2014년 22%를 기록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2007년 대비 7%p 상승해 2014년 24%를 기록했다. 다섯째, 저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 비중이 2007년 15%에서 2014년 23%로 증가해 상용직 내에서도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또한, 임시직 비중이 2014년 56%로 가장 크고 2007년 대비 5%p 증가했다. 여섯째, 대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저임금 근로자 중 고졸 비중은 2014년 47%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17%에서 2014년 22%로 상승했다. 일곱째,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7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몰려 있고,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내 비중도 급증했다. 여덟째, 저임금 근로자 중 전문직의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저임금 근로자 중 단순 노무직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서비스직과 판매직 순으로 높지만, 최근에는 전문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 시사점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심화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시급제와 일급제 등 처우 수준이 열악한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복지 혜택도 제고하는 등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 할 수 있는 출산, 육아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및 비중

- OECD 기준 저임금¹⁾ 근로자²⁾의 비중이 2014년 3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5.0%에 달하고,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27.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27.0%를 기록하다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14년 25.0%로 전년대비 3.3%p 상승함
 -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low pay) 근로자는 중위 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함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OECD 선진국 평균보다 9%p 높은 수준임
 - 한국과 미국은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14%, 스위스는 9%로 낮은 편임

<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

< 주요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주 : 1) 2011년 기준. 독일, 스위스는 2010년 기준
- 2)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데이터와 OECD 2011년 데이터와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

1) 이 보고서에서 중위 임금 및 평균 임금은 통계청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중위 임금은 190만원으로 나타나 저임금 근로자는 127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함.
 2)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뉘고 임금근로자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고,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2.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

- (임금 형태) 저임금 근로자는 월급제 비중이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낮은 반면 시급제, 일급제 비중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높음
- 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제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고,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40% 수준에 불과함
 - 2014년 월급제로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07년 대비 6.3%p 증가해 53%를 기록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1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21만원)의 40% 수준에 불과함³⁾
- 저임금 근로자의 시급제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고 증가세를 나타냄
 - 저임금 근로자 중 일급제와 시급제의 비중은 2014년 각각 21%, 17%로 나타났고, 2007년 대비 시급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일급제 비중은 감소함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형태별 비중 >

(단위: %, 만 원)

	비중		임금	
	2007	2014	2007	2014
시급제	13.7	17.2	48	60
일급제	29.1	21.3	60	77
주급제	0.7	0.4	49	59
월급제	46.4	52.7	73	91
연봉제	1.4	0.8	80	114
실적급제	8.3	7.4	53	70
기타	0.4	0.2	42	49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가중 월평균 (1~3월) 임금.

<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형태별 비중 >

(단위: %, 만 원)

	비중		임금	
	2007	2014	2007	2014
시급제	4.4	5.6	70	94
일급제	13.2	9.2	95	125
주급제	0.3	0.2	88	115
월급제	62.0	63.3	180	221
연봉제	14.2	16.6	260	349
실적급제	5.8	5.1	135	175
기타	0.2	0.1	72	116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가중 월평균 (1~3월) 임금.

3) 2014년 최저임금제에 따르면, 시급은 5,210원, 일급은 41,680원, 월급은 1,088,890로 나타나 이들 저임금 근로자 중 월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는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저임금근로자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커널밀도함수를 통해 살펴보니, 월평균 임금이 대략 100만원, 115만원에 많이 몰려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중위 임금은 90만 원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4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1~3월) 임금은 223만4천 원으로 나타났고 중위 임금은 190만원으로 나타남.

- (사회 보험과 근로 복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 저임금 근로자는 낮은 사회 보험 가입률로 인해 이들의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함
 -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 연금 가입률은 37.1%, 직장 건강 보험 가입률은 34.5%로 매우 저조함
 -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33.0%로 매우 낮아 저임금 근로자는 낮은 임금 수준과 함께 고용의 안정성도 매우 취약함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외 근로 복지 수준도 매우 미흡한 수준임
 - 퇴직금, 상여금, 시간 외 수당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저임금 근로자 중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20%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3 수준으로 매우 낮음

<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 보험 가입률 >

(단위: %)

	저임금 근로자		전체 임금 근로자	
	2007	2014	2007	2014
국민 연금	24.2	37.1	62.6	68.4
건강 보험	27.7	34.5	63.9	71.8
고용 보험	24.4	33.0	55.6	68.6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주 : 1)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 2)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복지 수혜율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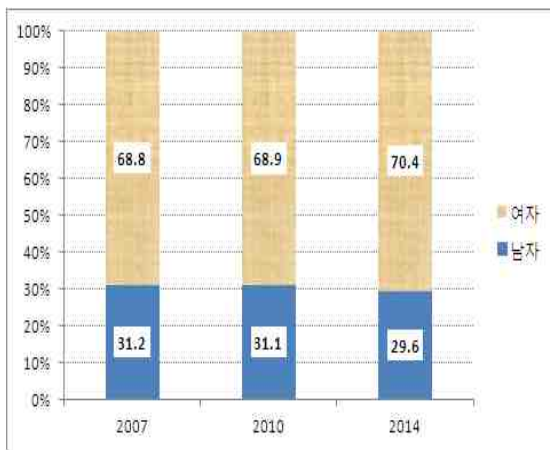
	저임금 근로자		전체 임금 근로자	
	2007	2014	2007	2014
퇴직금	18.2	28.9	55.9	68.9
상여금	17.0	32.2	55.5	70.4
시간 외 수당	12.5	14.9	43.2	47.5
유급 휴가	13.4	20.0	48.0	60.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주 : 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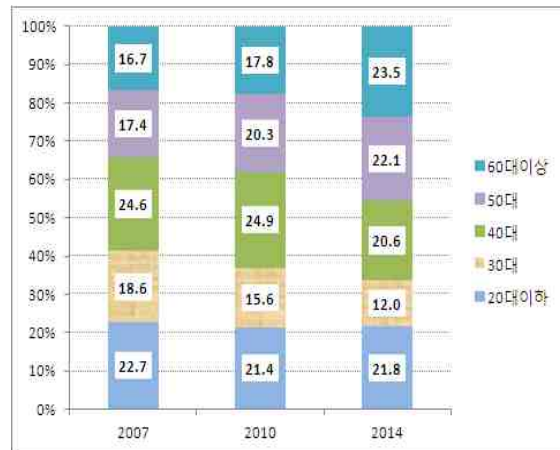
- (성별)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음
 -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를 나타냄
 - 저임금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70%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 대비 1.6%p 소폭 증가함⁴⁾
-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
 - 저임금 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
 - 저임금 근로자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22%를 기록해 2007년 대비 5%p 상승함
 - 60대 이상 고령층이 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몰림에 따라서 고령층 비중은 2007년 대비 7%p 상승해 2014년 24%를 기록
 - 50세 이상의 비중은 2007년 34.1%에서 2014년 45.6%로 크게 증가

< 저임금 근로자의 성별 비중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저임금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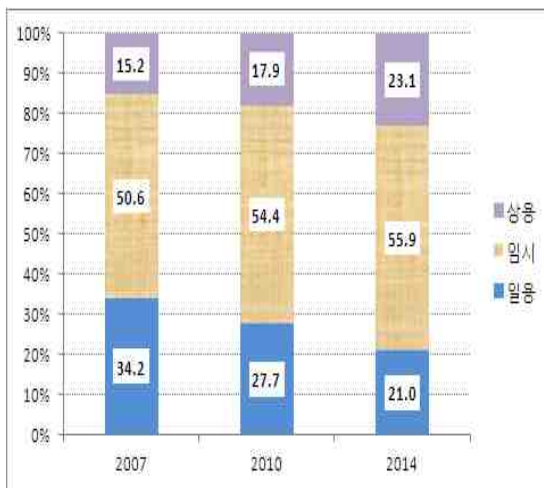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4년 6월 기준 20대는 65.1%, 30대는 59.1%, 40대는 66.8%, 50대는 62.7%를 나타내 30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며 경력 단절 후 40대와 50대에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여성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노동 시장 재진입시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게 됨에 따라 여성의 저임금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종사자 지위별) 상용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상용직과 임시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이 2014년 55.9%로 가장 크고 2007년 대비 5.3%p 상승해 임시직은 고용 안정성 뿐 아니라 임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저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⁵⁾ 비중이 2007년 15.2%를 나타냈으나 2014년 23.1%를 기록해 상용직 내에서도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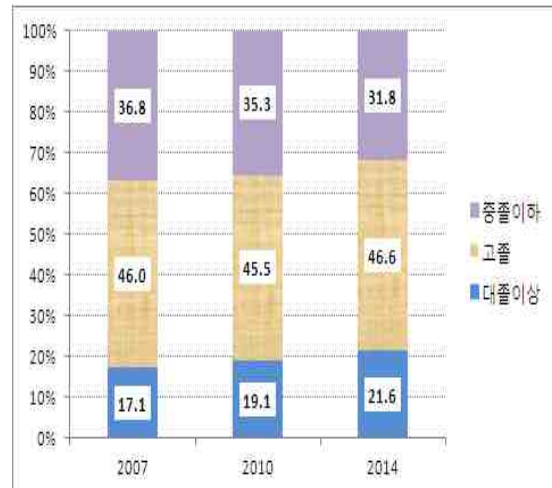
- (학력별) 저임금 근로자 중 고졸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대졸 이상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학력자의 임금 불안이 심화
 - 저임금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저임금 근로자 중 고졸 비중은 2014년 46.6%로 가장 높지만 2007년 대비 큰 변화는 없음
 -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2007년 17.1%에서 2014년 21.6%로 상승함

< 저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저임금 근로자의 학력별 추이 >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5)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는 상용 근로자임.

- (산업별)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7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상승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크게 증가
 -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15%,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4년 10.8%를 기록
- (직종별) 저임금 근로자 중 전문직의 비중이 증가세
 - 저임금 근로자 중 단순 노무직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서비스직과 판매직 순으로 높으며, 전문직의 비중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직, 판매직의 비중은 2014년 각각 38.3%, 17.7%, 11.8%를 기록함
 - 저임금 근로자 중 전문직 비중이 2007년 9.2%에서 2014년 11.7%로 증가

<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별 비중 추이 > (단위: %)

	2007	2010	2014
제조업	15.7	13.0	11.4
건설업	8.4	6.9	5.3
도매 및 소매업	14.7	15.0	14.7
운수업	2.4	2.3	2.2
숙박 및 음식점업	13.1	12.8	14.3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	2.7	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	8.3	9.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9	6.6	5.3
교육 서비스업	7.9	8.5	7.5
보건 복지 서비스업	3.5	6.6	10.8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5.7	5.4	6.8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주 : 1) 산업 9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하여 주요 산업분야만 정리함.
 2) 2014년 기준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각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임금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20.5%, 도매 및 소매업 12%, 교육 서비스업 7.5%, 숙박 및 음식점업 6.7%, 건설업 7%, 운수업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3%로 나타남.

< 저임금 근로자의 직종별 비중 추이 > (단위: %)

	2007	2010	2014
관리자	0.1	0.1	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2	10.2	11.7
사무 종사자	9.6	9.3	9.9
서비스 종사자	15.4	15.7	17.7
판매 종사자	10.6	12.3	11.8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9	0.7	0.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0	6.7	4.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6.5	5.4	5.4
단순노무 종사자	39.7	39.6	38.3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주 : 1) 직업 6차 개정을 적용하여 분류함.
 2) 2014년 기준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각 직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관리자 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3%, 사무 종사자 21.9%, 서비스 종사자 9.3%, 판매 종사자 8.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8%, 단순노무 종사자 15.3%로 이들 직종에 많이 취업되어 있음.

3. 시사점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강화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 복지 혜택도 제고하여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의료·고용 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 근로 복지를 강화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함
 - 저임금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 및 지원 규모를 확대
- 저임금 근로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확대 등 고용의 안정성 제고
 - 노인 빈곤층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들 고령층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
 -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
-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출산, 육아 관련 휴직 제도와 탄력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충실하게 마련함
 - 육아 휴직 없이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인센티브 제공
-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
 - 영세 자영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수익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